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박진현



최근 국내 미술계의 핫 이슈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모네에서 피카소까지' 특별전이다. 이 전시는 필라델피아 미술관의 컬렉션 25만 여점 가운데 인상주의 걸작 96점이 선보이는 자리로, 서양 미술사에 빛나는 명작들을 감상하려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필라델피아 미술관의 '서울 나들이'를 접하니 문득 2년 전 여름 필라델피아에서의 감동이 새록새록 되살아난다. 필라델피아 미술관의 보물 1호 '그로스 클리닉'(Gross Clinic·1875년 작) 때문이다. '그로스 클리닉'은 100년 전 필라델피아의 의료현실을 생생히 드러낸 기록화라는 점에서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지만 '그로스 클리닉'은 필라델피아의 엄지손가락과 같은 존재다.

'필리'가 키운 '그로스 클리닉'

필라델피아 출신의 사실주의 화가 토마스 에이킨스(Thomas Eakins)가 그린 이 작품은 1875년 당시 미국에서 가장 존경

받았던 의사 사무엘 그로스(Samuel D. Gross) 박사의 수술장면을 그렸다. 골수염 환자의 수술을 집도하는 그로스 박사와 환자의 환부를 찢고 있는 의사와,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는 의대생들의 긴장된 모습이 마치 한 장의 사진처럼 생생하다.

이 작품이 처음 선보였을 때 필라델피아 시민(필라·Philly)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당대 최고의 명의 그로스 박사의 수술 장면은 전혀 훌륭하지도 또 엄숙해 보이지도 않아서였다. 더욱이 어두운 조명 아래서 맨손으로 수술도구를 사용하는 광경은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미국에서 수술받은 환자들이 돌연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대 이 그림으로 불결한 수술환경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에이킨스가 의도했던 것처럼 않았건 그림은 필라델피아의 의료환경 개선을 가져왔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너무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당시 200불이란 험값에 제퍼슨 의과대학에 팔리는 굴욕을 겪었다. '그로스 클리닉'이 필라델피아 미술관의 컬렉션이 되기까지는 시민들의 공이 컸다. 필리들은 필라델피아의 역사에 담긴 '그로스 클리닉'이 의과대학에서 더부살이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이런 필리의 가슴에 크리스티 경매의 마크 포터 회장이 불을 댕겼다. 지난 2006년 포터 회장은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그로스 클리닉'을 공공자산 차원에서 구입을 권유했다. 당시 '그로스 클리닉'의 가격은 약 6천800만 달러(750억 원)였다.

25만 여점의 컬렉션 가운데 필리의 사

'그로스 클리닉'을 도시의 명품으로 키운 필리의 감동스토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와 예술의 도시를 상징하는 변변한 콘텐츠가 없는 광주에는 더욱 그렇다. 전국 최초의 지방 공립 미술관으로 개관한 광주 시립미술관은 연륜에 걸맞은 명작이 거의 없어 '속빈 미술관'이란 불명예를 얻은 지 오래다. 작품 구입비의 대부분을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사들이는 데 사용하다 보니 미술관의 '아이콘'이라고 할 만한 명작은 커녕 정체성 없는 컬렉션으로 전락했다.

광주 역사 담은 '아이콘'을

어디 시립미술관뿐인가. 광주의 대표 예술축제인 광주공연예술제에도 '광주'는 없다. 지난해의 경우 '지킬 앤 하이드' '로미오와 줄리엣' 등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대부분 외국산(産)이었다. 광주의 역사와 유산을 노래와 춤으로 풀어낸 문화 콘텐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올해는 광주 5·18 민주화쟁이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마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5·18을 뮤지컬로 제작한 '화려한 휴가'를 광주의 문화콘텐츠이자 브랜드로 육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록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부터라도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콘텐츠로 키워나가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 문화도시 광주에 필요한 건 콘텐츠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광주의 콘텐츠'를 키우자

람을 한눈에 보는 '국민 작품'이 없어 아쉬웠던 미술관은 '그로스 클리닉'을 품에 안기 위해 팔을 걷었다. 미술관은 금쪽같은 컬렉션 2점을 다른 미술관에 매각했지만 목표액 750억원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이 같은 사연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자 시민들이 나섰다. 2년간 계속된 모금 캠페인에는 유치원생이 내놓은 1달러에서부터 기업인이 기부한 100만달러 등이 모여져 지난 2008년 8월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안겼다. 시민들의 정성에 보답이라도 하듯 '그로스 클리닉'을 보기 위해 매년 국내에서 50만명의 관람객이 미술관을 찾는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강대석



올 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이 내리고 춥다. 요즘에도 전남도청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청사 입구 양편에 까만 비닐 포장에 덮여 겨울을 나고 있는 수많은 벼슬들을 볼 수 있다. 이 벼슬들은 지난 가을 농민단체 등에서 쌀값 안정대책을 요구하며 정부 대책에 대한 항의표시로 아저씨 놓은 것들이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농촌에서 자란 필자는 도청을 드나들면서 이 벼슬들을 보면 주체념해도 입무를 떠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옛날 어른들은 곡식을 생뿔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쌀 한

여 쌀 경영안정대책비로 지원한바 있다. 여기에 쌀 특별매입비로 400억원(농협 300억 원, 기금 100억 원)을 확보하여 과잉 공급되고 있는 쌀을 매입하여 수급을 조절토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

이것은 전남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고심 끝에 대책을 마련한 것이지만 따지고 보면 정부가 할 일을 떠맡은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쌀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삶과 직결된 의식주 문제이자, 식량 안보 차원의 문제로 어느 특정 지자체가 떠맡아 해결하기엔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남도를 비롯한 전북, 충남 등 비농사가 많은 몇 개 도에선 매년 이러한 대책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중앙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소요된 예산을 해당 지자체의 부담으로 묻어두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지방교부세 등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전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아울러 비농사는 생명산업이자 안보 산업이다. 경제 논리에 의한 쌀값 대책이 아닌, 농촌도 살리고 농민도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농업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어렵던 70년대에도 이중 곡가제를 실시하여 쌀값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던가? WTO 이후 아무리 여건이 달라졌다고 해도 요즘 세종시나 4대강 사업처럼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면 쌀 문제 하나 해결하는 일도 아닐 것이다.

〈전남 생물산업진흥재단 행정지원실장 정리추경에 4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 시인〉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자를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기고

전영복



광주지역 숙원사업비를 비롯한 중요 사업 예산이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예결위에서 줄줄이 삭감되었다고 한다. 국립 광주문화전당 건립 예산 200억 원 등 지역 출신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확보한 예산까지 깎았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예결위에서 국회의원들이 1조 355억 원을 증액하여 파워게임 하듯 관공 기업을 380여 개로 늘어 6천 명이 동하였음에도 관련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것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아쉬워하는 등 여기 저기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뭘 했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광산업 태동 시기인 2000년으로 돌아보았다. 김대중 정권 시절이지만, 당시 국회는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이 버티고 있었다.

예결위에 상정된 광주 광산업 예산은 3천억 원이었다. 수적 우위에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광주에 광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반대하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다. 이에 당시 예결위원인 박광대 의원은 정회를 요청하고 그 중에서 제일 심하게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모 의원을 회의장 밖으로 불러내어 육탄공격도 불사하며 실득작업을 벌였다. "광주와 무관한 의원이기에 30년 만에 모처럼 광주에 집단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따

졌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한나라당은 폭력의원이라며 박의원의 사과를 요구했고, 박의원은 공식 예결위원회 회의석상이 아니었으므로 공식사과를 할 수 없다고 버티 3일간이나 예결위가 공전이 되었다. 결국, 예결위 속개를 조건으로 이모 의원에게 개인적인 사과를 했지만, 광산업 예산은 어느 누구의 반대도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박 의원은 광주시장이 된 후 정부에서 6천억 원을 더 지원받아 총 9천억 원을 투자하게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광주

광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언

그렇다면, 광주의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됐는가? 국회의원과 장관을 역임하고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J 씨가 "광주 국회의원 2명이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였음에도 관련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것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아쉬워하는 등 여기 저기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뭘 했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광산업 태동 시기인 2000년으로 돌아보았다. 김대중 정권 시절이지만, 당시 국회는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이 버티고 있었다.

예결위에 상정된 광주 광산업 예산은 3천억 원이었다. 수적 우위에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광주에 광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반대하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다. 이에 당시 예결위원인 박광대 의원은 정회를 요청하고 그 중에서 제일 심하게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모 의원을 회의장 밖으로 불러내어 육탄공격도 불사하며 실득작업을 벌였다. "광주와 무관한 의원이기에 30년 만에 모처럼 광주에 집단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따

광산업은 최근 1~2단계 사업을 마무리, 9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매출 1천300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대로 올라섰다. 관련 기업도 380여 개로 늘어 6천 명이 동하였음에도 관련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것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아쉬워하는 등 여기 저기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뭘 했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광산업 태동 시기인 2000년으로 돌아보았다. 김대중 정권 시절이지만, 당시 국회는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이 버티고 있었다. 예결위에 상정된 광주 광산업 예산은 3천억 원이었다. 수적 우위에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광주에 광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반대하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다. 이에 당시 예결위원인 박광대 의원은 정회를 요청하고 그 중에서 제일 심하게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모 의원을 회의장 밖으로 불러내어 육탄공격도 불사하며 실득작업을 벌였다. "광주와 무관한 의원이기에 30년 만에 모처럼 광주에 집단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따

어느 도시 보다도 잘사는 1등 광주를 만들기 위해 한마음으로 똬똠 것이 오늘 날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다. 광산업을 시작했던 당시의 열정으로 돌아가 광주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 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LP가스 스프레이 '폭발 위험' 질소가스 사용 의무화해야

머리에 헤어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혹은 향기를 내는 방향제를 많이들 쓴다. 그런데 여름철과 달리 겨울철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를 하지 않고 스프레이를 잘못 뿌리다가는 그해 폭발로 인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광주와 무관한 의원이기에 30년 만에 모처럼 광주에 집단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따

분사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안전하게 만들수는 없을까. 즉 질소 가스는 폭발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질소가스를 써야 하는데 업체들이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이 질소 가스 대신에 LP 가스를 쓰고 있다. 정부는 방향제의 용기와 규격에 대해 안전성을 감안해 LP가스 대신에 질소가스를 사용토록 의무화시켜야 한다. ▲김윤남·광주시 남구 방림1동

시설

불쌍 사나운 '공직사회 지방선거 줄서기'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역사회 유력인사들의 지방선거 출마선언이 잇따르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자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것이다. 시·군 단체장의 비협조로 전남지역 부군수 인사가 어려움을 겪을 정도다. 공무원들의 극심한 눈치보기로 지역 현안 차질은 물론 선거 후유증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들의 줄서기 폐해는 특히 단체장이 중도 사퇴하거나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공무원들이 유력 후보에게 선거 관련 정보를 앞다퉈 제공하면서 공직사회가 정치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자치제 전면 실시 이후 네 번의 선거를 치렀으나 공무원들의 선거 눈치보기는 치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보다 먼저 '충성'

을 해야 선거 이후 승진이나 보직인사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공직사회에 팽배해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공무원 줄서기는 논공행상(論功行賞)식 선심성 인사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 정착에 악적인 존재다. 공무원들의 선거철 눈치보기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주민복리를 위한 지방행정 구현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키워나가려면 공무원 줄서기를 막을 수 있는 인사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다.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평가받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

공직선거법 60조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와 사정 당국은 철저한 법규 적용을 통해 위반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유력 입후보자들 역시 공무원 조직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젠 '민생 치안'마저 지방 홀대인가

이명박 정부의 지방 홀대가 해도 너무한다. 수도권 규제완화, 세종시 블랙홀도 모자라 이번엔 경기도 치안 수요 확충을 위해 광주·전남 등 지방 경찰청 정원을 감축기로 했다고 한다. 치안이 수도권만 중요하고 지방은 필요 없다는 것인지 발상 자체가 한심할 뿐더러 현 정부의 지방에 대한 시각을 다시 확인한 것 같아 허탈감마저 느낀다.

경찰청은 최근 인구가 늘어난 경기도 치안 수요를 충족한다는 이유로 광주·전남 등 지방경찰청 정원 507명을 감축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청과 전남청은 각각 14명, 30명에 대한 정원 감축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이 줄면 지역 민생치안 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경찰청은 인력 부족과, 고령화, 그리고 지방 경찰의 사기저하를 낳기 때문이다. 더욱이 광주·전남은 여수세계엑스포와 함께 U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눈 앞에 두고 있어 치안 수요를 확충

해도 시원찮은 판에 오히려 인력을 줄이겠다는 것은 무슨 속셈인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경찰청은 이번 정원 조정을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변경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현상에 따른 경기도 인구의 증가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정부로부터 경기도 치안 수요에 맞는 인력 충원 예산을 미리 확보했어야 당연한 일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다. 민생 치안에는 수도권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수도권 치안만 편했다면 지방 치안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건가. 이는 수도권 주민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방사람은 국민이 아니라 것과 뭐가 다른가.

경찰청은 수도권을 위해 지방의 민생치안을 약화시키는 정원조정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無等鼓

대학은 흔히 상아탑(象牙塔)으로 불린다. 상아탑이란 속세를 떠나 조용히 예술을 사랑하거나 현실도피적인 아카데미즘을 지칭하는 말이다. 세속적인 생활에 관심을 갖지 않고 고고한 예술치상주의를 견지해 온 19세기의 프랑스 시인 드 비니(Alfred-Victor de Vigny)를 평할 때 처음 사용된 용어로 오늘날에는 대학의 상징어로 정착했다.

시대에 따라 대학을 의미하는 별칭도 달라진다. 70년대 초반에는 '우골탑'(牛骨塔)으로 불려졌다. 농촌에서 대학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재산목록 1호인 소를 팔아 등록금을 마련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우골탑도 옛

말이 됐다. 연간 대학 등록금 1천만원 만들기 위해 한마음으로 똬똠 것이 오늘 날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다. 광산업을 시작했던 당시의 열정으로 돌아가 광주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 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인골탑(人骨塔)



어렵다. 상당수 사립대학들은 막대한 적금들을 쌓아놓은 채 학생들의 호주머니에만 손을 벌리고 있다. 정부가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차원을 떠나 등록금 원금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말대로 돈이 없어 대학을 못 다니는 학생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고경석 사회2부장 ksgo@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대표전화 222-8111
www.kwangju.co.kr